

‘기후대응댐’ 14곳 전면 재검토… 지천·아미천 등 5곳 건설

기후부, 지천·아미천 다목적댐 추진
병영천·화야강 홍수조절 기능 보장
고현천댐 증고해 극한호우 대응
감천·가례천은 신규댐 대신 대안
사업비 4.75조 → 1.67조로 축소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규 댐 건설 사업 중 최종 추진 여부가 미정이었던 7곳의 행방이 확정됐다.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5곳은 댐 건설을 추진하고, 하천정비나 기존 저수지 연계 등 대안이 더 효과적인 2곳은 신규 댐 신설 대신 대안 사업으로 전환한다. 절감된 예산은 전국적 기후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홍수방어 및 치수 사업에 투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잔여 신규 댐 7곳에 대한 정밀 재검토 및 전문가 공론화 위원회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 기후위기 대응 목적으로 14개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효성 논란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됐다. 이에 이재명 정부 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범 이후 정밀 재검토를 거쳐 지난해 9월 주민 반대가 심하고 필요성이 낮은 7곳의 건설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전문가 및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나머지 7곳의 이수·치수 현황, 물수급 분석, 대안 검토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해 왔다.

최종 검토 결과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화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은 댐 건설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지천댐은 상습 홍수 피해 방어와 함께 최근 충청권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하루 18만 톤)를 고려해 다목적댐으로 건설된다. 아미천댐 역시 연천 시가지 홍수 방어 및 자체 수원이 부족한 파주·연천 일대의 용수 공급(하루 8만 톤)을 위한 다목적댐으로 추진되며, 상류 지역으로 입지를 조정해 수몰 면적을 줄이고 건설 비용을 절감했다.

지방정부의 식수댐인 병영천댐과 화야강댐은 홍수조절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병영천댐은 하류 병영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댐 아래 신규로 댐을 건설해 2004년 9월 발생한 최대 강우량(기원최대강우 100년 빈도)에도 대응할 계

획이다. 화야강댐은 기존 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용량 810만톤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하류 시가지 구간 홍수량의 약 20%를 저감하게 된다.

특히 최근 극한 호우로 인해 하천범람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거제시의 경우, 홍수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고현천댐을 증고하고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용량 최대 62만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대된 홍수조절용량과 수문을 활용해 이번과 같은 극한 호우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은 신규 댐을 짓지 않는 대안을 선택했다. 감천댐은 인근 김천부향댐의 운영 수위를 조정해 약 600만 톤의 홍수조절 용량을 추가 확보하고, 하류 시가지 병목 구간 준설 및 홍수방호벽 설치 등 하천정비를 병행하기로 했다. 가례천댐(서암저수지)은 신규 증고 대신 기존 지하 수로터널로 연결된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용을 통해 홍수조절 역량을 확보하고 남강으로 직접 방류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이로써 당초 14곳에 달했던 신규 댐 건설 계획은 최종적으로 7곳 중단, 2곳 대안 추진, 5곳 건설로 최종 정리됐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도 당초 추정치인 약 4조 7500억 원에서 약 1조 6700억 원 수준으로 3조 원 이상 크게 축소된다. 기후부는 절감된 예산을 댐-저수지 연계, 도심 대규모 저류지 설치, 5대 강 지천 정비 등 전국적인 치수 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건설이 확정된 5개 댐은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규댐 7곳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신규댐 건설을 포함한 수자원의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홍수, 가뭄 피해를 줄이고, 국가첨단산업 등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대형마트·백화점 ‘갑질’ 과징금 최대 200%

공정위, 5년 내 1회 위반 과징금 가중
4회 이상 반복 땐 최대 100% 추가
자진시정 감경 한도 10%로 축소
연내 시행령·과징금 고시 개정 추진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유통 플랫폼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갑질이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최대 200%까지 올라가고, 최근 5년 이내 단 한 차례만 법을 위반해도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하도급, 가맹, 대리점 분야에 이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도 과징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해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반 행위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매기는 정률과징금 부과 범위를 넓힌 점이다. 그동안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고 5억 원의 정액과징금 부과에 그쳐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위반금액 산정이 불가능하더라도 위반 행위와 관련된 납품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 매입액, 즉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정률과징금을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위반금액과 관련 납품대금을 모두 파악할 수 없을 때만 정액과징금이 적용된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종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을 현행 140%에서 최고 200%로 상향했다. 새로 도입되는 관련 납품대금 기준 정률과징금 부과율 역시 매우 중대한 위반 기준 최대 10%까지 부과된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기존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위반 전력이 있어야 가중 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과거 5년 내 단 1회만 위반했어도 최대 50%의 과징금이 가중된다. 5년 내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높아진다.

반면 법 위반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감경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조사와 심의 단계에 모두 적극 협조했을 때만 최대 10% 감경이 적용되며,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한도 역시 종전 최대 50%에서 10%로 줄어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과징금 상향 변경, 과징금 부과방식 이원화 등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이 최초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연내 시행령 개정과 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무보, 트라피구라와 맞손… 핵심 원자재 공급망 강화

호르무즈 위기 속 조달 경로 다변화
원유·광물 수입에 금융지원 확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세계 최대 원자재 중개기업인 트라피구라(Trafigura)와 손잡고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 지원에 나섰다.

무보는 현지시간 26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트라피구라와 금융지원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트라피구라는 원유와 광물 등 핵심 원자재를 전 세계 공급 네트워크를 통해 중개하는 글로벌 거대 기업이다.

이번 협약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내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오른쪽)이 현지시간 26일 스위스 제네바 트라피구라 그룹의 본사에서 트라피구라 PTE Ltd의 CEO 리처드 홀텀(Richard Holtum)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보

기업의 핵심 원자재 수입 및 조달 경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트

라피구라는 주로 국내에 주요 에너지와 광물을 공급하는 한편, 한국 기업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구매하는 등 활발한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무보는 금융지원을 통해 양측의 거래를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앞서 무보는 지난해 7월 트라피구라가 국내 해운사에 부담하는 용선료에 대해 2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금융을 최초로 제공한 바 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에너지 소비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핵심 원자재 확보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필수 원자재 수입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이달 중하순 한국을 찾은 가나·나이지리아·라이베리아·케냐·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5개국 농업부 공무원과 유엔식량농업기구 담당자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아프리카 농기계 역량 연수

5개국 공무원·FAO 관계자 초청

한국농어촌공사가 ‘아프리카 농업기계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7~26일 열흘간 가나,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5개국 농업부 공무원 10명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지역 담당자 6명을 초청했다.

이번 연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지원으로 아프리카의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의 농업기계화 정책과 운영 경험을 공유해 참가국의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연수는 실무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론 교육과 현장견학을 병행했다. 참가자들은

▲벼 밸류체인(가치사슬)과 농업기계 ▲한국의 농기계 정책 ▲한국의 기후 스마트 농업기계화 등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기계화 과정과 기후변화 대응 사례를 살펴봤다.

또 농촌진흥청, LS엔트론 등을 방문해 농기계 품질관리와 장비 표준화, 테스트 시스템 등 선진 기술을 직접 확인했다. 충북 진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 시스템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는 운영 모델을 배웠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는 한국 농기계가 발전해 온 과정과 주요 기술을 둘러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서해 NLL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해수부, 불법어구 철거·인공시설 추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불법어구에 대한 강제 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인공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해양경찰의 단속 장비 및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경찰청 등과 이 같은 내용의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서해 NLL 이남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

업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부 외국어선이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이용해 단속 세력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리고 불법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해경과 해군, 해수부, 지방자치단체 등 선박 31척을 투입해, 연평도 인근에서 장기간 머문 외국어선을 합동 단속했다. 당시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 조치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해경은 NLL 이남 전 해역에서 단속을 강화한다. 군과 경찰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 대응 속도도 높인다.

/세종=김연세 기자